

2015 법원직 헌법 1책형

총평

이번 법원직 헌법문제는 예년과 비슷하게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차이점이라면 단순암기보다는 이해를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엽적인 문제 보다는 기존의 기출지문을 변형하는 지문과 최신판례(2014년 판례)를 묻는 지문이 나왔다.

개별법령의 조문은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

헌정사를 묻는 문제가 3문제 출제되었지만 다 기출지문이다.

문제만 놓고 보면 쉬운 문제인데 다른 과목과의 시간배분에서 실패하면 점수를 잘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설강의는 공단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정답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제한을 말하는 것이고 반드시 법률의 형식에 의할 필요는 없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2. 정답 ③ 독신자의친양자 입양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3. 정답 ④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이상의 시도 당과 각 시도당의 당원수를 1000명 이상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4. 정답 ④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지켜야 하지 당연히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기출지문이 아니었지만 나머지 3지문이 모두 기출지문이었고 정답도 쉬운 지문이었음.
5. 정답 ②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이 기출지문은 아니었지만 기출문제집에서 예상판례로 수록해 둔 것이었음. 나머지 3지문이 모두 기출지문이었고 정답도 쉬운 지문이었음.
6. 정답 ② 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심리이고 판결은 언제나 공개해야 한다.
라.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7. 정답 ① 국회의원은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를 겸할 수 있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8. 정답 ③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는 없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9. 정답 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 정답은 기출지문이 아니었지만 나머지 3지문이 모두 기출지문이었고 정답도 쉬운 지문이었음.
10. 정답 ④ 검찰총장의 임명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한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11. 정답 ① 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12. 정답 ③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성장은 헌법에 규정이 없다. 정답은 기출지문이 아니었지만 나머지 3지문이 모두 기출지문이었고 정답도 쉬운 지문이었음.
13. 정답 ④ 지방자치단체는 영토고권을 가지지 않는다.(천안 아산역 사건)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14. 정답 ② 3.1운동에서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15. 정답 ② 건국헌법은 국무총리와 부통령을 모두 두었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16. 정답 ④ 알권리의 핵심은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17. 정답 ③ 탄핵에는 적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18. 정답 ③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19. 정답 ④ 행복추구권은 8차개헌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20. 정답 ③ 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은 헌법상의 재산권이다. 정답은 기출지문이 아니었지만 나머지 3지문이 모두 기출지문이었다. 이번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21. 정답 ④ 음주운전에 대해 필요적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은 기출지문이 아니었지만 나머지 3지문이 모두 기출지문이었고 정답도 쉬운 지문이었음.

22. 정답 ③ 선구구의 일부에 위법이 있어도 전체가 위법해진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23. 정답 ④ 현재는 야간옥외집회를 24시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시간적 범위를 지정하여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다. 기출지문은 아니지만 최신판례 특강 때 정리했고 기출문제집에도 예상판례로 분류되었음.
24. 정답 ④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재량이고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
25. 정답 ③ 근로의 권리는 일자리 제공청구권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기출지문에서 정답이 결정